



2013 FDI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이수구 협회장 선임 실무팀 6~7명 위원회 구성...차기이사사회 위원 추임

오는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01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이수구 현 협회장이 선임됐다.

지난 2008년 5월 협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안성모 집행부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서울총회 유치를 위해 일본, 중국, 호주뿐만 아니라 FDI 총회가 개최되는 스웨덴, 싱가포르, 브라질 등에서 총회유치를 위해 진두지휘하면서 대회 유치를 성공시킨 이 협회장이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중책을 맡게 됐다.

치협 이사회는 11월 16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11일 열린 조직준비위원회(위원장 양정강)에서 추천한 이 협회장을 조직위원장에 선임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고 차기 집행부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 관계 등을 고려해 완성된 조직위원회 보다 실무팀 6~7명 선으로 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차기이사회에서 위원을 추임기로 했다.

최종적인 조직위원회는 내년 4월 차기 협회장 선거를 통해 차기 집행부가 구성된 뒤 새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선임을 차기 집행부가 구성된 뒤 하지는 일부 의견

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 이사회가 불가피하게 조직위원장을 먼저 선임한 것은 FDI 본부와의 관계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대회 일정상 당장 진행해 나갈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위원장 선임은 지난 1997년에 열린 서울총회의 경우 대회 개최 4년 7개월 전인 1993년 2월에 조직위원회 구성이 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며, 대회유치가 확정된 뒤 곧바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늦은 상황이다.

2013년 서울총회를 진두지휘할 조직위원장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9월 4일 유치확정 후 조직준비위원회가 가동돼 FDI 본부와의 계약체결과 실무준비 작업이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 더욱 공신력을 갖추며 준비업무를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수구 협회장은 "부회장들과 잘 상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실무팀으로 6~7명 선으로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구성해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구 조직위원장은 유치가 최종 확정된 만큼 빠른 시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장소 협의와 PCO 결정, 정부와의 협조와 지원 확보, 국내 및 대외 홍보, 아태회의의 참가 등 산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이동치과병원 부속차량 활용도 모색 남구협 실무위원회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 5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남북구강보건 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는 11월 8일 서울역 내 모 음식점에서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동치과병원 부속차량의 다양한 활용도에 대해 모색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이동치과병원을 보조하는 부속차량 제작과 관련해 이동치과기공실 용도 뿐 아니라 구강보건 교육 등 남구협 사업 전반에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량제작에 신경쓰기로 했다.

이날 실무위는 직접 부속차량을 관찰하고 기공장비 설치 공간과 구강보건교육 자료 등을 보관하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검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되도록 차량 내부를 일부 개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무위는 이동치과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

련을 위한 운영규정(안)과 함께 이동치과병원 부속차량에 대한 운영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구수정 등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점검했다.

특히 실무위는 이동치과병원과 부속차량에 대한 운영 및 관리와 관련, 의료봉사에 지원될 경우 이동치과병원 및 부속차량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점검, 수리 등 감가상각을 고려한 임대료를 받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소정의 임대료 책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실무위는 각 단체별로 남구협 년도별 분담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미납액에 대해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위 회의에는 김홍석 치협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해 이상복 건치 남북특위 위원장, 배현숙 치위협 부회장, 유홍근 치기협 사업이사, 이계우 치재협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News
& News

전문의 시험 출제 계획안 최종 점검 수련고시위원회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김철환·이하 수련위)가 성공적인 2011년도 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1월 22일 김여갑 학술담당 부회장, 김철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 6일 필기시험으로 시작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 2차 시험을 무난하게 치르기 위한 출제 계획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학회별 필기 및 실기시험의 출제 계획안을 최종 점검했으며,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시험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하 구강외과학회)는 타 분과학회와의 통일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조정된 100분항, 시험시간 120분으로 변경해 시험을 치르는 것에 합의했다. 구강외과학회는 지난 3월 문항수와 시험 시

간 변경에 대해 학회가 찬성 또는 동의의 입장을 피력한 바도 없는데 치협에서 공문을 통해 개정된 시험문제수와 시험시간을 통보해 왔으며, 현행 문항수와 시험시간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결국 지난 회의에서 김철환 위원장이 위임 받아 해결에 나설 것을 결정, 구강외과학회와의 합의를 이뤄냈다.

김철환 위원장은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외과에서 타 학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문항수와 시험 시간으로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배려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는 전문의자격시험의 개선점을 심도 높게 연구하고자 내년 초 워크숍을 열 것을 결정했으며, 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여갑 학술담당 부회장은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지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
& News

치협 '구강보건법' 개정 추진 국민·소외계층 구강보건 향상 주요내용 명시

국회가 치협의 건의를 받아 현재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중심의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구강보건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조영식 치협 기획이사는 최근 K의원실을 방문해 국민 구강건강을 도모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현행 구강보건법 문제점과 개정사항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전달하고 구강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K의원실은 치협 제안내용이 국민과 소외계층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내용인 만큼, 법 개정에도 나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치협이 국회에 건의한 구강보건법 주요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하고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장애인 구강진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구강진료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에 대한 국가 의무를 명시했다.

노인 구강건강사업과 관련,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진단과 보

건교육을 실시할 때 구강건강진단과 구강보건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구강건강 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 등의 구강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에는 없는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사업', '치과주치의의 계속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명시, 어린이구강건강 관리사업을 대폭 확대토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구강건강정책 책임관'을 지정토록 해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군·구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는 현행법 상 임의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전환해 국가 구강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토록 했다. 또 구강보건협회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조영식 정책이사는 "구강보건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정책 건의는 사회적 약자이며 의료 취약 계층인 장애인, 노인 등의 구강보건 향상에 역점을 뒀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인 만큼, 국회가 전폭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